



재현되는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보리밭에서 하귀리 민속보존회 회원들이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를 재현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도-도의회, '협치' 회복할 수 있을까

올해 첫 추경안 놓고 신경전 넘어 갈등으로 심화
보조금심의, 송약산 매입 '심사보류' 등으로 증폭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자치도의회 간 협치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시회 과정에서도 벌어졌던 제주도과 의회간 기싸움이 갈등으로 심화됐고, 더욱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의회 예결위에서 심사 보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애꿎은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2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제416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최종 심사 보류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조 4767억 원을 편성하고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예산(7조 639억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억원 규모다. 제주도와 도의회 간 이상기류는 도의회 임시회 중 실시된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부터 감지됐다. 상

임위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불거진 집행부와 도의회간 예산편성 절차 및 의결권 침해 등을 놓고 기싸움이 이어졌다. 상임위에서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재차 보조금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의결권과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송약산 사유지 매입 예산 등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고, 제주도는 심사보류 다음날 즉각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 보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두 기관의 기싸움은 갈등으로 심화됐다. 이후 제주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올해 제주도 본예산보다 4128억원 늘어난 7조 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고 4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등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도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도의회와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막판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제주도가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을 담았다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보류되면서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제주도 추경 예산안은 내달 13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제4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회기에서도 두 기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도민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4·3 왜곡 처벌 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지난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후 법안소위로 넘겨져

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3월 발의한 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안과 희생자·유족 가족관계 관련 특례 규정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안 등 2건의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과 함께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됐다. 개정안은 지난 4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4·3 김일성 지령설 발언에 이어 일부 보수정당들의 4·3 왜곡 현수막 설치 논란이 일자 발의됐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도 내년 국비 2조 확보 '총력' 올해 본예산 1조8433억 대비 8.5% 증액 규모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비 2조 확보를 목표로 본격적인 국비확보 활동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 1조8433억원 대비 8.5%(3372억원) 증가한 2조 예산을 내년도 국비 반영 목표로 삼고 중앙부처 절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4년 국비사업 중앙부처 절충 및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 국비신청 현황과 절충 상황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말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중기사업계획에 신규 발굴사업이 포함되도록 협의에 나서며 정부예산안에 대응해 온 만큼, 5월 부처별 심의와 예산 편성 시기에도 포기 없이 재차 절충에 나서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태윤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설계... 3면 / 핵오염수 투기 저지 범도민운동본부 출범... 4면

더 많은 기회, 더 나은 행복을 제주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2023. 5. 1. ~ 7. 31.

- 공모분야** 4개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 도민 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 방안
 -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에 공고문 중 주의사항(심사제외대상 등) 확인 필수
-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 1부
 - ※ 신청서 서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 다운로드
 - ※ 전자우편 제출 시, 응모자 서명(또는 날인)된 스캔파일 제출 공모 신청서
- 심사발표** 2023. 9월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자 개별 통보
- 응모자격** 누구나
- 응모방법**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전자우편 : kyi6242@korea.kr
 - 등기우편 : 우)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담당자
- 작성요령** 공모 신청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아이디어 내용 (개선방안 및 대책),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5쪽 내외로 작성
- 시상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및 상금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100만원	각 60만원	각 40만원

※ 시상규모는 응모작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064-741-2271, 227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